

# 대법원 2018도4075

##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김재형)은 2018. 5. 11. 국회의원 권석창(자유한국당 소속, 제천·단양 지역구)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공소사실 중 '피고인이 ①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37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, ② 1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고, ③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'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,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4075 판결)

### 1. 사안의 내용

#### 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2015. 9. 11.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2015. 12. 1.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하였고, 2016. 4. 13.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·단양 지역구에서 당선한 사람임
- 피고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새누리당 당내경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함 ⇒ 국가공무원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
- 피고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2회에 걸쳐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⇒ 공직선거법 위반
- 피고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동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1,000만 원을 송금받음 ⇒ 정치

자금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

- 피고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동피고인 B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 ⇒ 정치자금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

▣ 원심의 판단

- 입당원서 모집행위 ⇒ 37명 부분 유죄, 67명 부분 무죄
- 12회에 걸친 기부행위 ⇒ 전부 유죄
- 공동피고인 A로부터 1,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 ⇒ 무죄
- 공동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 ⇒ 유죄

## 2. 대법원의 판단

### 가. 사건의 쟁점

- ▣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
- ▣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
- ▣ 기부행위가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
- 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 (일부 유죄 확정)

### 다. 판단 근거

- ▣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 법리를 따름
- ▣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에서 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'선거'에 해당하고, 타인을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

반드시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·계획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

-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운동기간 전에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
- 총 12회에 걸친 기부행위는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임
-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함

### 3. 판결의 의의

-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및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임